



유엔특별보고관(UN Special Rapporteur)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③

-이옥남(바른사회시민회의)

3. 유엔특보의 한국에서의 활동 문제점

□ 공정성 시비

- 유엔특별보고관은 유엔에서 명시하듯이 **공정성(impartiality)**과 **성실성(probity)**을 바탕으로 하여, 독립성(independence), 효율성(efficiency), 업무능력(competence), **진실성(integrity)**을 추구하며 업무를 수행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은 편향성(partiality) 시비로 조사 신뢰성에 의구심을 더함.

□ 잦은 한국 방문조사와 당사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

- 유엔특별보고관의 지역 현장 조사 및 방문은 인권상황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임. 유엔특별보고관이 방문한다는 그 사실 만으로 당사국의 인권이미지는 영향을 받음. 예외적으로 특수한 주제에 대해 영국, 미국, 일본 등을 방문조사 한 적이 있으나, 한국은 예외적으로 자주 방문조사 (표현의 자유 보고관은 2회)를 실시함. 이는 유엔조사대상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한국의 국가 위신을 고려하여 방문계획 단계에서 방문조사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가 요구됨.

□ 국내 정치 개입 논란

- 일부 유엔특보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은 유엔특보의 권한(mandate)을 넘어서는 행위로 유엔특보 본연의 임무의 인권조사에 대한 문제가 등한시 될 수 있음. 따라서 유엔특별절차의 본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유엔특보제도가 운영되어야 함.

4. 대응방안

□ 정부의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응

-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부 유엔특보의 한국에서의 편향적 활동 및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음.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, 자칫하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인권후진국의 이미지를 염려하여 유엔특보의 활동 및 결과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

듯한 인상을 줌. 이는 가까운 나라 일본이 유엔특보의 편향적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됨.¹⁾ 일본의 예에서처럼 유엔특보에 대한 맹신론적인 신뢰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엄정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됨. 특히, 유엔에 의해 왜곡된 조사 및 발표는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만큼 국가의 이미지와 위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. 이에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조사를 하는 지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

□ 제3기구의 유엔 모니터링

- 유엔은 인류 보편적 평화와 인권을 위한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국제기구이지만, 1945년 설립이후 조직의 비대화,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, 중복적인 사업, 분담금 등 예산문제, 감시기구의 부재 등으로 많은 한계점을 드러냄. 유엔의 세계 인권을 증진시키는 준엄한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과 이상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임. 그러나 유엔의 권위에 맹신하여 그 활동 내용까지도 맹신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제3기구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함. /끝/

1) KBS뉴스, 2015.11.10, 「일본 정부 “여학생 13% 원조교제” 유엔 보고관 발언 정정요구」